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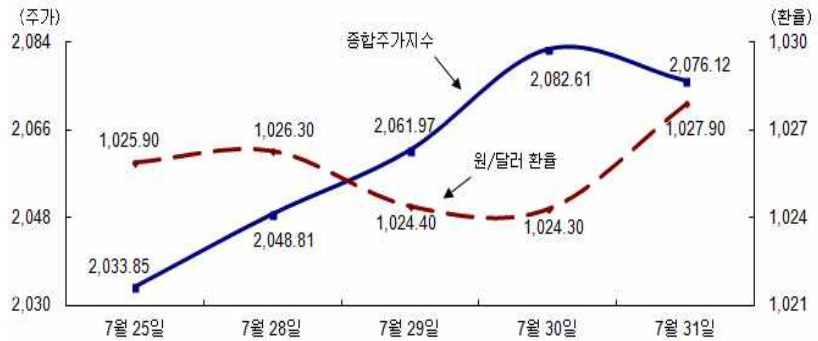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 여성, 노인, 모자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25~7.31)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오 준 범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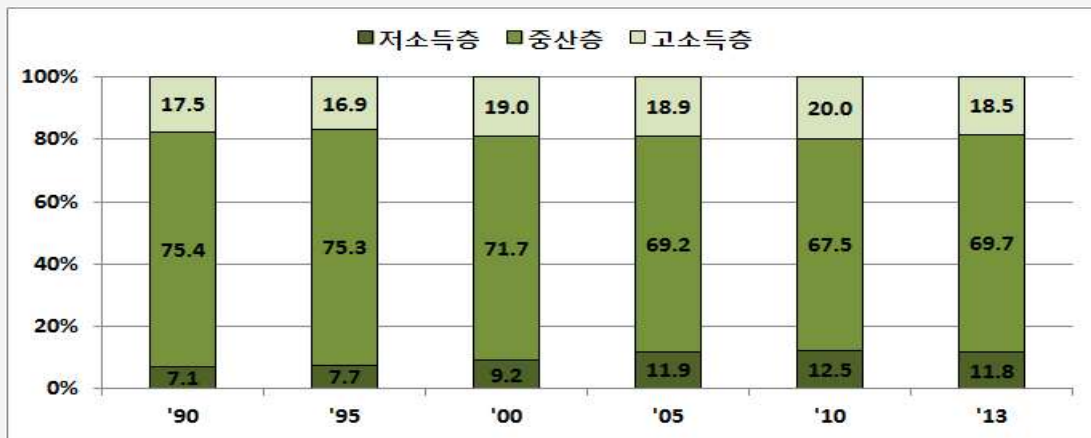
### □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 ■ 개요

(연구배경) 전체 국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은 곧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소득계층으로서 국민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계층이다. 국가의 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 이러한 중산층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경제성장력의 강건성 제고와 소득격차 문제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목적)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산층 비중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고 효과의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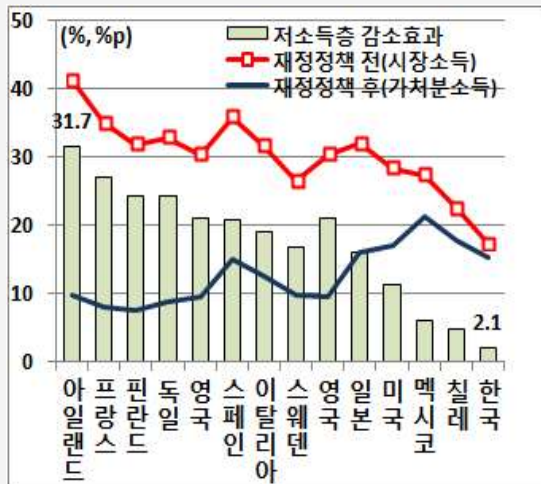
#### ■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정책이전 저소득층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재정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 비중 감소 효과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비중은 재정정책 전 17.3%, 후 15.2%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을 2.1%p 줄이는데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아일랜드(31.7%p), 핀란드(24.4%p) 등의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멕시코(6.0%p), 칠레(4.7%p) 등도 우리나라보다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이 컸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구주/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이전 여성, 60대 이상, 비취업,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서 전체가구에 비해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특성별로 여성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49.3%, 60대 이상 가구는 40.5% 비취업가구는 29.4%로 전체평균인 62.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구특성별로는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17.3%로 전체 평균에 크게 하회했다. 이들 취약계층 중 비취업가구와 은퇴한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크게 낮는데, 중산층 비중이 낮은 주된 이유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정정책 이후에도 이들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전(시장소득 기준) 62.1%, 재정정책 후(가처분소득 기준) 66.9%이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4.8%p로 2006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정책이 중산층을 늘리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특성별로는 60대 이상, 비취업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가 크지만, 이들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특성별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측면을 살펴보면, 노인가구는 효과가 크지만, 모자가구 및 미취학아동가구에게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책 개선의 여지가 있다.

< OECD 국가 재정정책의 저소득층 감소 효과(2011년) > <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2013년) >



자료: OECD.

구분	정책전 비중(%)	정책후 비중(%)	제고효과 (p)	
전체가구	62.1	66.9	4.8	
가구주 특성별	여성	49.3	54.6	5.3
	60대 이상	40.5	50.7	10.2
	비취업	29.4	40.3	10.9
가구 특성별	노인	17.3	30.4	13.1
	모자	60.5	60.9	0.4
	미취학 아동	75.5	78.7	3.2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 시사점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을 취약계층으로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맞춤 정책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임을 감안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취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구직을 위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중산층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중산층 비중 제고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내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 1. 개요

- (연구배경) 국가의 재정정책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산층 비중을 제고하고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전체 국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산층은 곧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소득 계층으로서 국민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계층
    - 중산층은 국민경제의 주된 소비 계층이자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
    - 또한 중산층의 삶의 여건 변화는 국민 경제 전체의 변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음
  - 재정정책의 기능 중 소득재분배는 중산층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장력의 강건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
    - 재정정책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경제안정화로 구분
    - 이 가운데 소득재분배 기능은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력의 강건성 제고와 소득격차 문제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중요
- (연구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산층 비중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고 효과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2) 1990년 이후 중산층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1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의 중산층 비중과 상이함.

- (기본개념) 본 보고서에서는 중산층을 OECD기준으로 정의하고,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재정정책 전·후의 중산층 비중 차이로 정의
  - (중산층 정의)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 (OECD 및 한국 통계청 기준과 동일)
    -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수의 차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를 차감하기 위해서 소득을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눈 소득
    - OECD와 한국 통계청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을 저소득층, 50%이상 150%미만을 중산층, 150%이상을 고소득층으로 지칭
  - (재정정책효과 정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계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로 발생하는 중산층 비중의 변화로 정의
    - 재정정책 = 가계의 시장소득 - 가계의 가처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sup>1)</sup>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sup>2)</sup>
    - 즉, 재정정책은 가계가 정부에게 사회보험, 사회수혜금 등 지급받은 금액에서 세금, 사회보험 등 지출한 금액을 뺀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가계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에 따라 소득계층이 바뀔 수 있고, 이러한 소득계층의 이동이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정의
  - (공적이전정책) 정부의 공적이전 정책은 크게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별로 소득재분배정책이 포함됨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기초연금 : 기초연금 (2014년 7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 사회수혜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수혜금, 육아휴직급여, 출산장려금
    - 세금환급금 : 세금 및 건강보험료 환급금,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2015년 시행예정)

1) 사적이전소득은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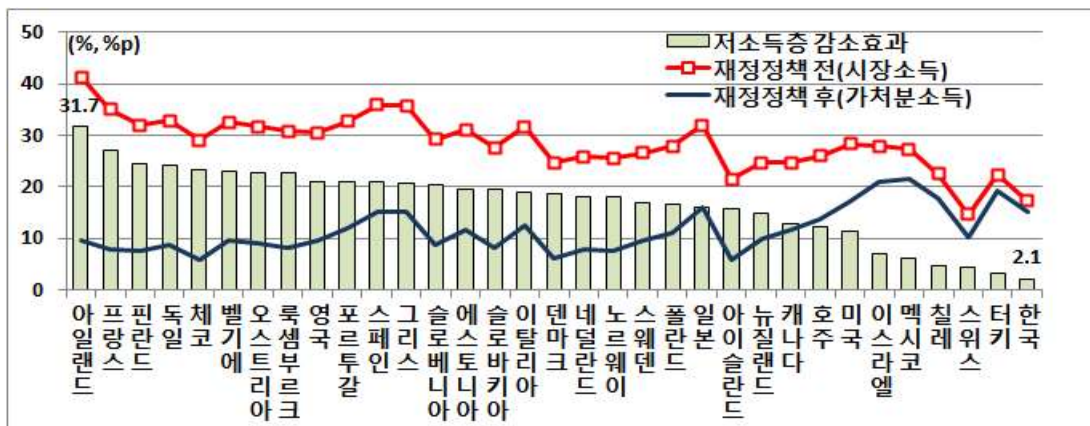
2)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이, 공적비소비지출에는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이 포함.

## 2.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의 문제점

### (1) OECD 국가의 재정정책 효과 비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정책이전 저소득층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재정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 비중 감소 효과는 최하위
- 재정정책 이전 저소득층 비중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지만 재정정책 이후에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수준
  -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이전 저소득층 비중은 17.3%로 스위스(14.7%)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
  - 그러나 재정정책 이후 저소득층 비중은 15.2%로 멕시코(21.4%), 터키(19.2%), 미국(17.1%) 등과 함께 높은 수준
- 재정정책 이후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
  -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전과 후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은 2.1%p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
  - 반면 복지가 잘 갖춰져 있는 유럽 국가의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은 아일랜드 31.7%p, 핀란드 24.4%p, 스웨덴 16.8%p를 보임
  -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인 멕시코(6.0%p), 칠레(4.7%p)도 우리나라보다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이 큼

< OECD 국가의 저소득층 비중 및 재정정책의 저소득층 감소 효과 >



자료: OECD(2011년 기준).

- 주: 1)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는 2012년, 벨기에는 2010년, 일본은 2009년 기준.
- 2) 시장소득이란 정부의 소득재분배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 비중.
- 3) 가처분소득이란 정부의 소득재분배 이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 비중.
- 4) OECD통계에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를 제공하지 않아서 저소득층 비중 감소 효과를 사용.

(2) 재정정책 이전 중산층 비중

○ 재정정책 이전 여성, 60대이상, 非취업, 노인가구 등 취약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전체가구에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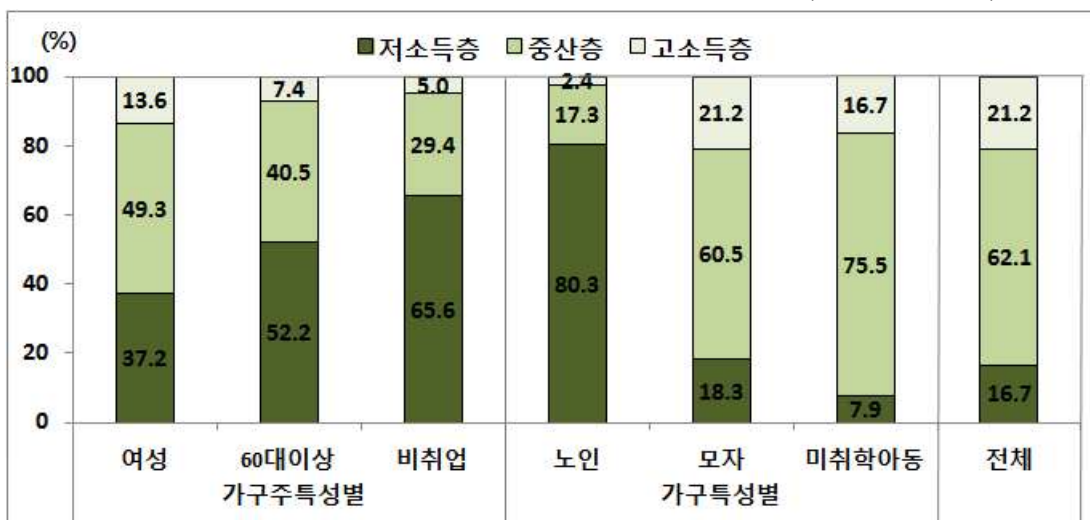
- 가구주특성별 비교에서 여성, 60대이상, 非취업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낮았으며, 그 중 비취업가구가 가장 취약

- 2013년 여성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49.3%, 60대이상 가구는 40.5%, 비취업 가구는 29.4%로 전체 평균인 62.1%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특히 가구주가 非취업상태인 경우 그 가구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취업지원 정책은 중산층 비중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함

- 가구특성별 비교에서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모자가구, 미취학아동가구는 상대적으로 중산층 비중이 높음

-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17.3%로 전체 평균인 62.1%를 크게 하회했고, 모자가구의 경우 평균과 비슷한 수준, 미취학아동가구는 높은 수준을 보임
- 모자가구와 미취학아동가구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생 활여건 취약, 출산을 제고 등의 이유로 취약계층으로 분류

< 재정정책 이전 가구주/가구 특성별 소득계층 비교(2013년 기준) >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3) 재정정책 이후 중산층 비중

○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 2013년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60대이상, 非취업, 노인가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큰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특성별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60대이상 가구가 10.2%p(40.5%→50.7%), 非취업가구 10.9%p(29.4%→40.3%)로 높게 나타남
- 가구특성별로는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만 13.1%p (17.3%→30.4%)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여성가구, 모자가구, 미취학아동가구의 경우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가 낮음

- 중산층 제고효과의 크기는 여전히 부족하여 취약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이후에도 여전히 크게 낮은 모습을 보임

- 재정정책이후 취약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60%를 크게 밑돌아 정책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미취학아동에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모자가구에 대한 자녀교육비 지원도 저소득계층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재정정책의 가구주/가구 특성별 중산층 제고 효과(2013년 기준) >

(%, %p)

구분		정책 전 (시장소득) 중산층 비중	정책후 (가처분소득) 중산층 비중	중산층 제고효과
전체가구		62.1	66.9	4.8
가구주 특성별	여성	49.3	54.6	5.3
	60대이상	40.5	50.7	10.2
	非취업	29.4	40.3	10.9
가구 특성별	노인가구	17.3	30.4	13.1
	모자가구	60.5	60.9	0.4
	미취학아동가구	75.5	78.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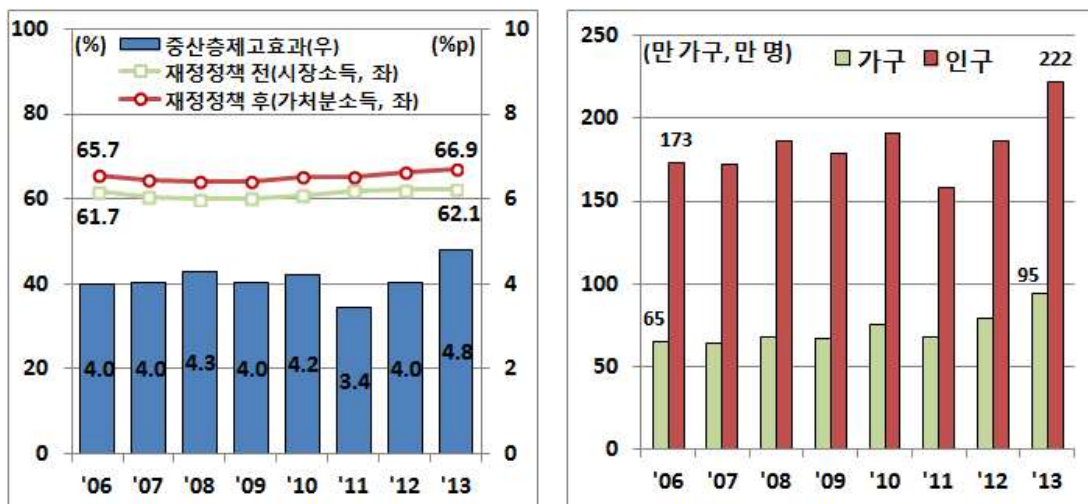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 (전체가구) 재정정책으로 인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2006년 이후 소폭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2006년 이후 60% 중반 대에 머물러 있음
  - 2013년 균등화 가치분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약 3,130만 명으로 2006년 2,841만 명보다 다소 증가, 한편 저소득층 역시 2006년 598만 명에서 2013년 641만 명으로 증가함
  - 2013년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 62.1%, 가치분소득 기준 66.9%로 2006년 61.7%, 65.7%에 비해 다소 증가
- 재정정책으로 인한 중산층 제고 효과는 4%p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중산층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 2013년 재정정책 전·후 중산층의 증가는 약 95만 가구, 222만 명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가구가 재정정책이후 중산층으로 편입
  - 그러나 중산층의 비중 제고 효과는 2006년 이후 4%p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정책이 중산층을 늘리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임
  - 이는 중산층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양극화 심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

<재정정책의 전·후 중산층 추이 및 중산층 제고 효과>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1) 농가가구를 제외한 전국가구 기준.

2) 중산층제고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과 가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의 차.

○ (가구주 성별) 여성가구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남성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남성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음<sup>3)</sup>

- 가구주 성별 소득계층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가구가 남성가구에 비해 중산층의 비중이 낮음

· 2013년 기준 남성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 65.0%, 가처분소득 기준 69.6%인데 반해, 여성가구는 시장소득 기준 49.3%, 가처분소득 기준 54.6%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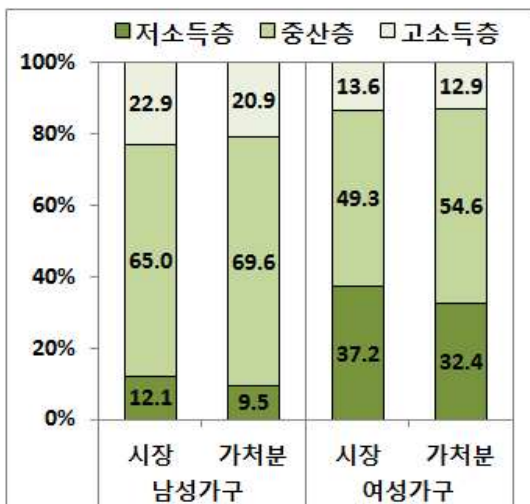
- 가구주 성별 중산층 제고효과는 여성가구와 남성가구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재정정책 이후에도 여성가구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취약

· 남성가구의 중산층 제고효과는 4.6%p, 여성가구의 경우 5.3%p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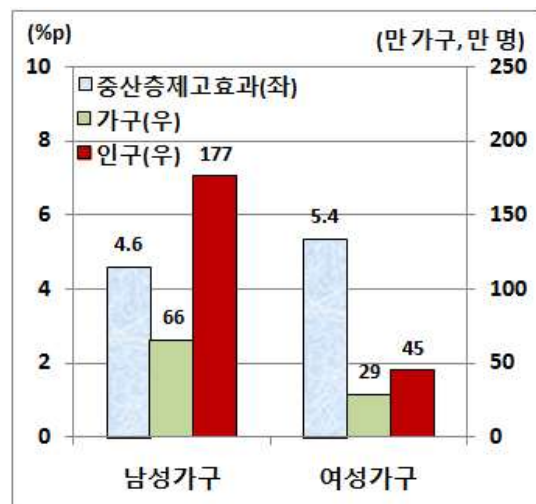
· 재정정책으로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가구 및 인구는 남성가구가 66만 가구, 177만 명이고 여성가구가 29만 가구, 45만 명

· 한편 여성가구는 재정정책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비중이 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

<가구주 성별 소득계층 비중(2013년)>



<가구주 성별 중산층 제고 효과(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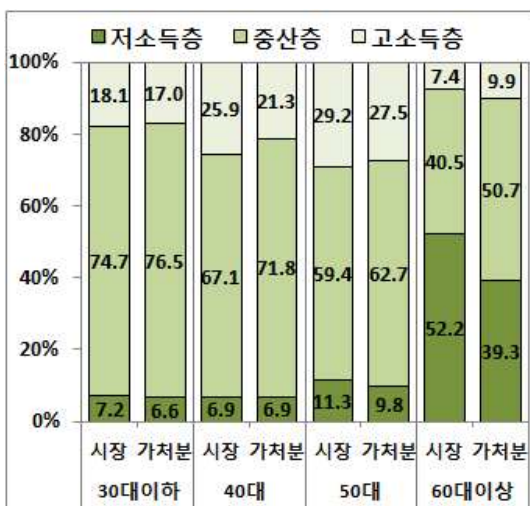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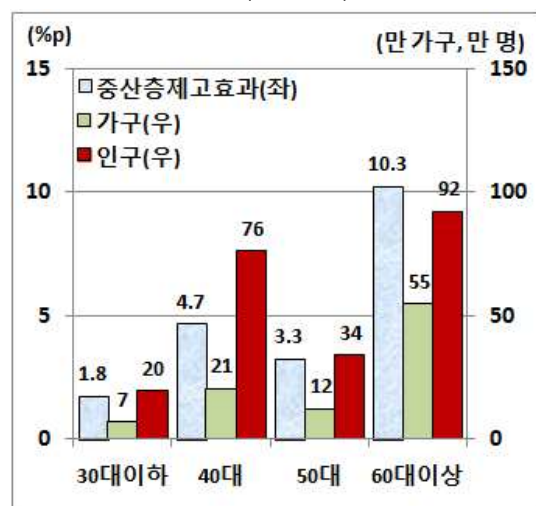
3) 남성가구는 가구주가 남성, 여성가구는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로 2013년 기준 남성가구는 1,214만 가구, 3,835만 명이 포함되고 여성가구는 466만 가구, 847만 명이 포함.

- (가구주 연령별) 연령별 중산층 제고 효과는 60대이상 가구에서 가장 크고 30대이하 가구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60대이상 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다른 연령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음
  - 가구주 연령별 소득계층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산층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2013년 기준 60대이상 가구주 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 50.7%에 불과한 반면, 30대이하 가구는 76.5%, 40대가구 71.8%, 50대가구 62.7%를 기록
    - 가구주가 50대 이상인 경우 가구주의 은퇴가 발생하는 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 가구주 연령별 중산층 제고효과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으로 60대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나, 소득재분배 정책 이후에도 여전히 60대이상 가구의 소득 수준은 취약
    - 2013년 기준 30대이하 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1.8%p에 불과한 반면, 40대 가구는 4.7%p, 50대 가구 3.3%p, 60대이상 가구는 10.2%p를 기록
    - 중산층 가구 및 인구 제고 효과에서도 60대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음
    - 그러나 60대 이상 가구는 소득 재분배 정책 이후에도 저소득층 비중이 3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음

<가구주 연령별 소득계층 비중(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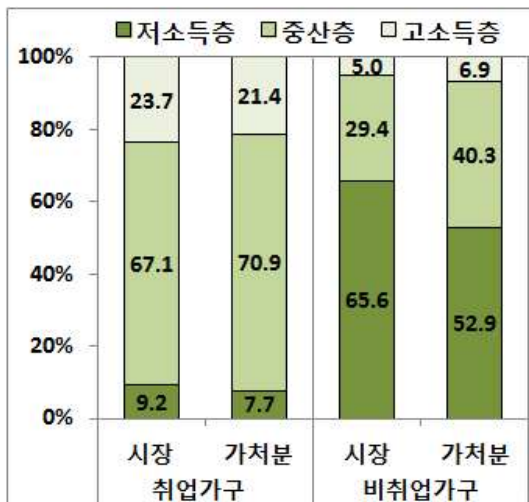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별 중산층 제고 효과(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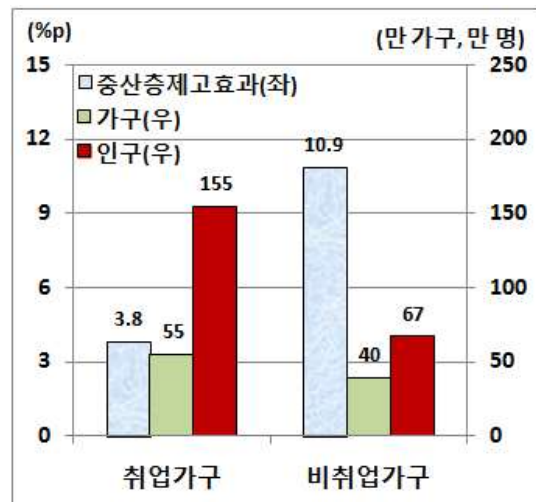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 (가구주 취업여부) 非취업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취업가구에 비해 큰 편이지만, 非취업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취업가구에 비해 크게 낮음<sup>4)</sup>
  -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경우 취업가구에 비해서 중산층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非취업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 29.4%, 가처분소득 기준 40.3%에 불과한 반면, 취업가구는 각각 67.1%, 70.9%를 기록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非취업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편이지만, 非취업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취업가구에 비해 크게 낮음
    - 非취업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10.9%p로 취업가구의 3.8%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정정책 이후 非취업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40.3%에 불과
    - 또한 취업가구 중 가처분소득 기준 7.7%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음
  - 非취업가구주와 직업을 가진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 중산층을 제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非취업가구는 일자리를 얻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가구주 취업여부별 소득계층 비중(2013년)>



<가구주 취업여부별 중산층 제고 효과(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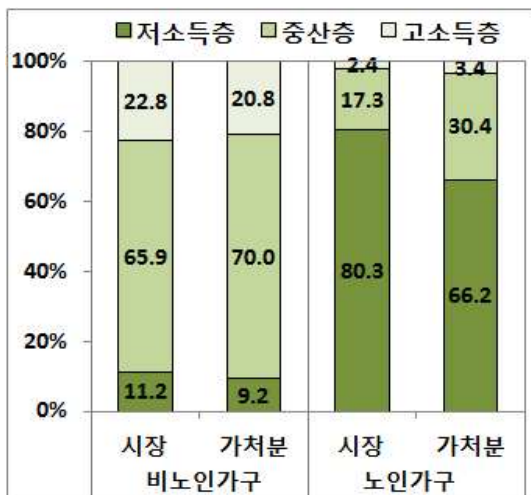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4) 비취업가구는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에 있는 가구로 2013년 기준 341만 가구, 617만 명이 포함.

- (노인가구) 노인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큰 편이지만,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非노인가구에 비해 크게 낮음)
  - 노인가구의 중산층 제고효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편이지만,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非노인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 17.3%, 가처분소득 기준 30.4%에 불과한 반면, 非노인가구는 각각 65.9%, 70.0%를 기록
    - 따라서 노인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13.1%p, 非노인가구는 4.1%p (가구 및 인구로는 노인가구가 31만 가구, 48만명, 非노인가구는 63만 가구, 174만 명)
    - 한편 정부 재정정책이후 노인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66.2%에 달해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
  -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은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어서 공적연금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노인가구는 저소득층을 벗어나기 어려움
    - 2013년 저소득층 중 노인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은 37만 원 수준이고, 그 중 56.4%가 공적연금이 차지
    -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노인가구는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
    - 또한 저소득층 중 노인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반면, 저소득 非노인가구는 사회수혜금이 큰 비중을 차지

<노인가구의 소득계층 비중(2013년)>



자료: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평균 공적이전소득(2013년)>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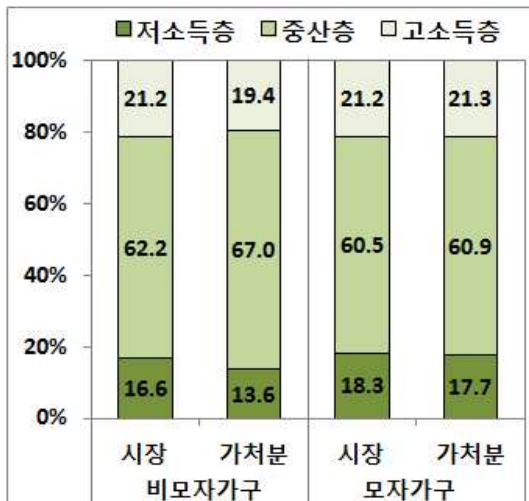
	노인가구	非노인가구
가처분소득	724,448	1,112,373
공적이전소득	366,766	353,557
공적연금	206,929	205,952
기초연금	85,816	20,904
사회수혜금	74,015	126,008
세금환급금	6	694

자료: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1)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2) 저소득층 구분은 시장소득 기준.

5) 노인가구는 가구 구성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로 2013년 기준 261만 가구, 368만 명이 포함.

- (모자가구) 모자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非모자가구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고, 모자가구의 중산층 비중도 非모자가구에 비해 낮음)
  - 모자가구의 중산층 제고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모자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非모자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모자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 60.5%, 가처분소득 기준 60.9%로, 非모자가구의 62.2%, 67.0%보다 낮은 수준
    - 모자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0.4%p에 불과해 非모자가구(4.8%p)보다 크게 낮았음  
(가구 및 인구로는 모자가구가 4천 가구, 5천 명, 非모자가구는 23만 가구, 93만 명)
  - 한편, 저소득층 모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은 사회수혜금이 차지
    - 2013년 저소득층 중 모자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은 15만 원 수준이고, 그 중 94.6%가 사회수혜금이 차지
    - 저소득층 모자가구는 저소득층 非모자가구에 비해 사회수혜금을 평균적으로 약 4.7만 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모자가구 가운데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질병, 장애 등 다른 요인으로 빈곤이 심화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더 늘릴 필요

<모자가구의 소득계층 비중(2013년)>



자료: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저소득층 모자가구의 평균 공적이전소득(2013년)>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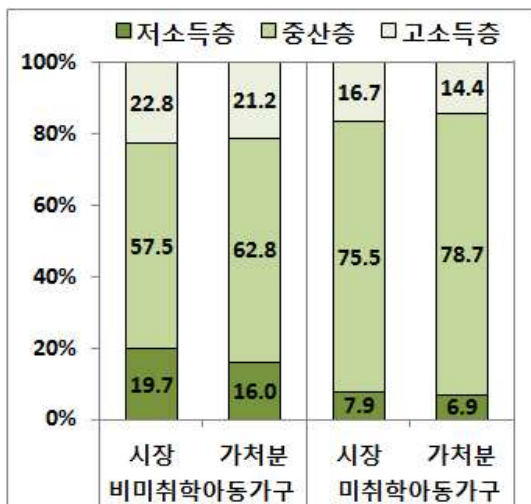
	모자가구	非모자가구
가처분소득	950,278	911,628
공적이전소득	153,954	365,015
공적연금	8,364	210,919
기초연금	0	55,577
사회수혜금	145,590	98,171
세금환급금	0	347

자료: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1)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2) 저소득층 구분은 시장소득 기준.

6) 모자가구는 어머니와 18세 이하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2013년 기준 47만 가구, 122만 명이 포함.

- (미취학아동가구) 미취학아동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非미취학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중산층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아동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非미취학아동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중산층 비중 역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미취학아동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 75.5%, 가처분소득 기준 78.7%로, 非미취학아동가구의 57.5%, 62.8%보다 높은 수준
    - 미취학아동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3.2%p로 非미취학아동가구(5.3%p)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 및 인구로는 미취학아동가구가 9만 가구, 39만 명, 非미취학아동가구는 86만 가구, 183만 명)
  - 한편, 저소득 미취학아동가구는 1.0%p가 저소득층을 벗어났는데 이는 양육수당 등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
    - 2013년 저소득층 중 미취학아동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은 21만 원 수준이고, 그 중 64.0%가 사회수혜금이 차지
    - 저소득층 중 미취학아동가구는 非미취학아동가구에 비해 양육수당 등의 사회수혜금을 평균적으로 약 3.8만 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

<미취학아동가구의 소득계층 비중(2013년)>



자료: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저소득층 미취학아동가구의 평균 공적이전소득(2013년)>

(단위: 원)

	미취학아동가구	非미취학아동가구
가처분소득	1,440,877	879,732
공적이전소득	210,929	369,625
공적연금	61,944	215,411
기초노령연금	10,963	57,042
사회수혜금	134,963	97,001
세금환급금	3,059	171

자료: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1)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2) 저소득층 구분은 시장소득 기준.

7) 미취학아동가구는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로 2013년 기준 306만 가구, 1,205만 명이 포함.



### 3. 중산층 비중 제고를 위한 재정 지출 규모 추정

- 재정지출의 구성비 변화 및 민간부문 지출 상쇄의 구축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을 현재 66.9%에서 70% 까지 높이기 위해서 약 7조 3천억 원의 재정 지출 필요
- (추정방법) 목표 수준으로 중산층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동일한 수준의 공적이전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
  - 재정지출의 구성비 변화 및 민간부문 지출 상쇄의 구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정임
  - 균등화 가처분소득기준 계층 구분에서 중산층 비중을 목표치(시나리오1=68%, 시나리오2=70%)만큼 제고하기 위해 공적이전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
  - 이때 모든 저소득층 가구는 동일한 수준의 공적이전소득을 얻게 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은 없음
  - 이를 가구수준에서 균등화되지 않은 가처분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간 공적이전지출을 규모를 추정<sup>8)</sup>
- (추정결과) 2013년 기준 시나리오1(중산층 비중=68%)을 달성하기 위해 약 2조 7,500억 원, 시나리오2(중산층 비중=70%)을 달성하기 위해 약 7조 3,000억 원의 재원 필요
  - 저소득층의 중산층으로의 이동만을 고려할 경우로 한정하여, 시나리오1의 경우 저소득층 비중이 12.6%로, 시나리오2의 경우 10.6%까지 감소
  - 이때 필요한 재원은 시나리오1의 경우 약 2조 7,500억 원, 시나리오2의 경우 약 7조 3,000억 원의 재원 필요<sup>9)</sup>

#### < 중산층 비중 제고 시나리오별 재정 지출 규모 추정 >

(%, 원)

구분	2013년 현재	시나리오1 (중산층비중=68%)	시나리오2 (중산층비중=70%)
저소득층비중	13.7	12.6	10.6
중산층비중	66.9	68.0	70.0
추가소요 재정지출	-	약 2조 7,500억	약 7조 3,000억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1인 이상 비농가가구 기준.

8) 균등화되지 않은 가처분소득으로 환산 시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공적이전소득의 차이가 발생함.  
 9) 단, 정부의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위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은 필요재원의 과소추정 가능성이 높음.

#### 4. 시사점

○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원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 2014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은 105.9조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안의 29.6%를 차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중산층 제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증대 방안 필요

둘째, 중산층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을 취약계층으로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 노인가구, 여성가구, 모자가구, 미취학아동가구 등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정책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동일한 조건의 취약계층이라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의 제도를 통해서 재정지원이 한 가지 정책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

셋째,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취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 탐색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적어도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은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

넷째, 중산층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중산층 비중 제고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 재정정책의 목표를 '중산층 70%달성' 등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
- 앞으로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의 비중 제고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방안 모색 필요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내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극대화는 중산층 비중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의료관광의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등 핵심 서비스업 분야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극대화에 주력

오준범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참고】 주요 재정정책

< 주요 재정정책(공적이전소득 중심) >

구분	종류	정책대상자
공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li> <li>- 공무원연금</li> <li>- 사학연금</li> <li>- 군인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대 이상 연금가입자</li> <li>- 전체 가구 중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대상 가구</li> </ul>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li> </ul>
사회 수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li> <li>-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아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아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아동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성공패키지지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성공 시 수당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원, 장애인, 결혼이민자, 출소자, 여성가장 등</li> <li>-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35~64세 중장년</li> <li>- 만 18~34세 미취업 청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질병 관련 요양 급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 중 노인이 있는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가구</li> <li>- 부자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관련 급여 및 보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li> <li>-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등을 부여 받은 근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관련 수당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급여</li> <li>- 산재급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자</li> <li>- 산업재해자</li> </ul>
세금 환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및 건강보험료 환급금</li> <li>- 근로장려금(EITC)</li> <li>- 자녀장려세제(CTC) (2015년 시행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급여 차등)</li> </ul>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7월 24일	7월 3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50	2.56	0.06%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82	102.80	0.98 ¥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464	1.3390	-0.0074\$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084	16,563	-521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284	15,621	33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50	2.52	0.02%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28.6	1,027.9	-0.7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26.6	2,076.1	49.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7월 24일	7월 3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3.77	98.09	-5.68\$
	Dubai	107.99	100.38	107.88	105.79	105.23	-0.56\$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98.89	295.13	-3.76\$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6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5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6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5.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7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455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5,836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4.3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381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4.4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1.7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